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3497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김준형 · 이재강 · 정혜경
박은정 · 김재원 · 최혁진
서왕진 · 황운하 · 문대림
손 술 · 윤종오 · 강경숙
전종덕 · 정춘생 · 차규근
권칠승 · 이해민 · 서영교
신장식 · 이용선 · 김선민
백선희 · 한창민 의원
(23인)

주 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계기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는 “합리적 근거”와 “완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당국과 보안군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객관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 65,419명이 사망했고, 신원이 확인된 60,199명 중 18,430명은 어린이, 9,735명은 여성이다. 가자지구의 기대수명은 2023년 10월 이전 75.5세에서 1년 만에 절반 수준인 40.5세로 급감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거주 고층 아파트와 병원을 고의적·압도적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피소와 식량 배급소, 안전지대조차 예외가 아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장관은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동물’이라 칭하며 집단학살을 방조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보안군은 대피 경로와 안전 구역 내에 민간인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발포하여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민간인들과 의료진, 언론인, UN 구호 요원까지 살해하였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이후 매일 평균 10명의 아이들이 한쪽 혹은 양쪽 다리를 잃었으며, 의료 물품 반입 차단으로 마취 없이 절단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이 구금되어 고문·구타·강간·성폭력에 노출되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 2년 간 가자지구 인구 90%에 해당하는 190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겪었으며, 이스라엘 보안군이 미래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가자 전역에서 산부인과 병원 및 병동을 포함한 생식 및 모성 건강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미 2023년 12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종말론적”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등 반인도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4년 11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집단학살 협약에 따라 2024년 1월 26일, 3월 28일, 5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에 구속력을 지닌 잠정 조치에 관한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은 재앙적이며, 이스라엘은 라파주에서 군사 공격 및 기타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을 여전히 거부하면서, 오히려 요르단강 서안지구까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공습을 확대하며 학살을 지속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북부 전면 봉쇄와 체계적인 구호품 반입 금지로 인해, 가자지역 전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공식적으로 가자 주(Gaza Governorate)에 ‘기근’을 선포하며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9월 25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사망한 사람은 440명이며, 이 중 어린이는 147명이다.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집단학살의 금지는 국제법상 어떠한 예외도 없는 절대적 규범이다. 집단학살 협약은 조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국제 사

회가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침해하는 전쟁 범죄 등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민간인을 향한 표적 공격 등 중대한 범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에 참담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모든 인류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반인권적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 등 모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적대 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과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대응과 접근을 즉각적으로 허용하고, 가자지구 전역에서 신속하고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

든 봉쇄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특정 무기와 장비가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법과 인도적·인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25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 포르투갈, 덴마크 등이 선언하는 등 160여 개국이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승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건 없이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승인하고,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회원국 모두가 유엔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가 가자 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 모든 회원국 정부에게 명시한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25년 10월 7일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이스라

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대규모의 인도적 재난과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당국과 군부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선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에는 “이스라엘 당국과 이스라엘 보안군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집단학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지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집단학살 방지’와 ‘팔레스타인 주민의 참당한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결정과 권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습니다. 2025년 9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을 포함하여 160여 개가 넘는 대부분의 UN 회원국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법과 인권 수호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외교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과 인류 보편의 인권·인도주의 규범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외교적·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